

‘중북’의 두 가지 의미



글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연속교육팀장, 변호사

‘중북(從北)’. 단 두 글자로 이루어진 이 짧은 단어가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hot)한 말이 되고 있다.

포털 검색창에 ‘중북’이라고 치면 ‘중북세력’, ‘중북좌파’, ‘친노중북’, ‘○○○ 중북’ 등 ‘중북’ 관련 각종 단어가 연관 검색어로 줄줄이 뜬다. 최근에는 ‘세월호 중북’ 같은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며칠 전, 광화문 거리를 걷다가 이런 문구를 보고 트악했다. “김정일 개○○ 못하면 중북” 시대는 바야흐로 21세기 대명천지인데 ‘이게 웬 십자가 밧기?’¹⁾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알고 보니 지상파방송에 나온 말이라는 것을 알게 돼 두 번 놀랐다. 지난 2012년 한 TV 토론 프로그램 출연자가 모 정당의 중북 논란에 대해 발언하던 중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최

소한 ‘김정일과 김정은 체제를 추종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왜 어렵나?”면서 “쉽게 말해 ‘김일성, 김정일이 개○○냐?’고 할 때 ‘개○○’라고 하면 중북세력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이후로 유행했다고 한다.²⁾

요즘 들어 ‘중북’이라는 말이 언론보도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공인 또는 유명인 간에 ‘중북’이라 했다가 송사로 이어지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만 해도 여럿으로 보인다.

‘중북’의 의미는 명확하다. 문자 그대로 ‘북한을 따른다’는 뜻이다. 북한 체제와 이념의 팔로워(follower)인 것이다. 그러면 ‘중북’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어떻게 될까? <국가보안법>이 서슬 퍼렇게 살아있는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 쉽게 말해 적(敵)이다.³⁾

1) 과거 국가권력이 기독교를 탄압하던 시절, 신자인지를 판명하기 위해 십자가를 밧도록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일종의 사상 검증의 수단이라 볼 수 있겠다.
2) “김정일 개○○ 못하면 중북”은 사상 검증의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일례로, ‘김정일 개○○’라고 못 하는 사람 중에는 욕을 할 수 없거나 욕하는 것이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김정일 개○○ 못하면 중북”이라는 표현은 일종의 과장된 수사(rhetoric)로 여겨야 할 것이다.
3) 이에 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한 논의는 이 글에서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일반적인 견해를 따라 글을 전제한다.

적에 동조하거나 적을 따르는 사람 역시 필연적으로 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복'하는 사람이나 단체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 안정을 위협하는 적이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중복'은 결코 쉽게 쓸 수 없는, 매우 치명적인 말이 분명하다. 내 편인지 적의 편인지를 가릴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너무나 크다. 그런 점에서 '중복'이라는 말은 최대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남발하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

지금까지 '중복'이라는 말로 인해 생긴 법적 분쟁의 쟁점은 주로 '명예훼손'이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단어의 쓰임새를 하나 더 추가해야 할 것 같다. 바로 '모욕'이다.

명예훼손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면, 모욕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이나 비판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에게 굴욕감을 안겨주고 싶을 때 우리는 그를 '모욕'한다. 이런 모욕의 한 방편으로 '중복'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한 사건(2013가합104616)은 그 좋은 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⁴⁾ 임수경 의원은 2013년 7월 27일 인천광역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 행사에 참석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같은 달 30일 다른 당 소속 박 모 의원은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중복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 성명서 발표와 관련해 임수경 의원은 박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 2억)을 제기했다. '중복의 상징'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만일 명예훼손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 표현이 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 소송 이유였다.

이러한 임수경 의원의 청구에 대해 1심 법원은 '모욕'을 인정,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주요 요지를 정리,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성명서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중복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이라는 표현뿐이고, 위 표현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성명서 중 위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

4) 이 사건 당시에는 소속 당의 명칭이 '민주당'이었다. 현 시점에 맞게 당 명칭을 수정했다.

어 있어, 위 표현의 앞뒤 문맥이나 전체적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고 평가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위 표현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암시한다거나 묵시적으로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중북’이라는 말이 대체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원고의 지위나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중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은 원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표현은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 박 의원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2014년 7월 31일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14나2011862). 이에 박 의원은 상고를 제기했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번 판결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 기준은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수단 혹은 방법이다. 명예훼손과 모욕 둘다 사람의 품성, 덕행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판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로써, 모욕은 ‘비판적 의견 표명’ 등으로써 성립한다. 그래서 ‘중북’이라는 말 역시 단지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의견 내지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그치면 모욕에 해당되고 더 나아가 북한 체제와 이념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구체적 사실 적시의 단계에까지 이르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보다 우려되는 것은 ‘중북’이라는 단어의 모욕적 사용법이다. 한 일간지에서 ‘우리 사회 공론장(公論場)에서 막말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⁵⁾ 공인의 사상 검증이야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도를 넘은 감정적 비난, 경멸, 모욕주는 사회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북’이라는 말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단지 막말에 그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사

5) 2014년 9월 5일자 조선일보 1면 「막말 폭력’에 멍드는 國格」

‘막말 폭력’에 멧드는 國格

“이러면, 박근혜가 어떤 기도에 대한 대비를 위한 보편을 할지해야 합니다. 이게 원천 미진 게 아닙니까?”

3일 오후 7시쯤 서울지역대학생연맹이 공화문공원에서 주최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문화제’에서 자신을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소속이자 이화여대 재학생이 라고 밝힌 양도(20)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대학생 대표로 나선 그가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내자 포레 대학생부 터 머리 칠만한 60대까지 200여명의 군중이 “와” 라는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양씨는 세월호 유족 감영호(47)씨의 단

시위현장·SNS서 “대통령이란 X” “단식하다 죽어라” 度 넘은 폭언 “공물책 발언은 사회의 품격— 막말이 박수받는 분위기 타고 증폭”

식에 의견을 제기한 보수단체 회원들을 가리켜 “이런 놈들 앞에 들어가는 줄이 아 잡고, 이런 자들이야말로 경제로 단식시켜야 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정부가 (세월호 사고의) 원인”, “(세월호특별법에 반대하는) 재난리당은 천일파”라고도 했다. 그럴 때마다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선 “울소”, “속이 다 후련하다”는 외침이 나왔다. 지나면 한 사람은 “젊은 세대들의

말이 어찌 저리 심해져서 거기서 박수를 쳐주는 어른들은 또 뭐냐”며 혀를 찼다. 우리 사회 공론장(공물책)에서 막말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개념의 목소리가 높 아지고 있다. 집회 시위 현장, 정치권, 인 터넷과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등 각 공 공간을 기질 것 없이 막말이 난무한다. 이전과 결별대 정치외교학과 재원교수는 “정치인이나 집회 참가자의 막말은 어찌

오늘 일이 아니지만, 세월호 참사라는 역 가적 재난 이후 다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최근의 막말 풍토는 세월호 유족 감영호 씨의 대통령 취임 논란에서 징검다리 이었다 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앞에서 경찰 에 길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대통령이란 X야 똑같은 거야, XXX년이지”라는 욕설을 했고, 이 모습을 담은 동영상은 천 국인들 사이에서 “해도 나뉘면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특별취재팀 A3면 계속**

‘막말 폭력’ 시리즈 ▶ A3면

2014년 9월 5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막말 폭력’에 멧드는 國格」

람들은 이 표현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미디어가 만들어 낸 대중적인 용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중복’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봤다.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은 필요하다. 공격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상이나 이념에 대한 폭넓은 비

판과 검증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최소한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그저 경멸이나 증오의 분출에 지나지 않는 감정적 비난을 단지 공인이라는 이유로 감수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복’이라는 말의 모욕적 사용법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